

社說

신갈호 오염, 학교차원 관심 필요

이번에 우리학교 환경학과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연구조사해 발표한 '신갈호 유입하천 및 신갈호의 생태계 복원연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고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신갈호에 대한 연구조사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간간히 이루어져 왔을 뿐이고 그나마 조사기간이나 방법 등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환경학과 교수진들이 참여해 근 일년여 기간동안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는 신갈호와 주변하천의 수질오염상황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신갈호수의 심각한 오염상태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생활환경에 관한 수질환경기준을 다섯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신갈호수는 국내 호수수질 기준상 5등급에 해당된다고 한다. 참고로 1등급은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수질인데 반해 5등급은 가장 낮은 질의 공업용수로 쓰이는 수질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신갈호의 수질은 공업용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하더라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갈호가 거대한 폐수저장조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갈호의 오염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우리학교가 신갈호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수원캠퍼스 도서관앞에서 보면 신갈호가 바라다보이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원캠퍼스는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도서관 완공과 함께 학교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면서 더이상 신갈호의 문제는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만일 도서관쪽으로 새 건물이 들어서거나 개발이 된다면 신갈호는 학교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신갈호의 오염문제는 지역차원뿐만 아니라 학교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영통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주변 교통망이 확장되면서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번 신갈호 오염 연구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신갈호 관리와 개발에 학교와 지역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다.

법원만이 예술의 소유자인가

소설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시비로 법적제재를 받은 이후 검찰이 작가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때문에 출판사측의 작품회수도 일단락 되는 듯 했던 이번 시비가 문단의 반향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이 소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이유는 "노골적 성묘사에 치중해 성적 수치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 검찰의 논리는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다. 90년대 이후 성문학은 80년대의 리얼리즘의 쇠퇴한 자리를 메웠다. 90년대 문학에서 성은 기성도덕을 거부하는 상징적 장치로 인식되어 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섹스묘사=외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다.

그러나 이런 외설시비를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당국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사건 발생 시작부터 결말까지 너무나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그러하고, 작가 자신의 변론이나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게다가 독자들은 이 작품에 대해 잔혹 호기심만 품고 있지 정작 이 소설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독자들에게 의해 자율적으로 평가되기도 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의 태도가 못마땅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물론 출판사의 발빠른 굴복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 출판여건에서 음란판정을 받은 출판사가 등록 취소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출판사의 행보를 망상 매도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문화, 예술에서의 음란시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공개된 장에서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충분한 숙고와 전반적인 비판기능 없이 법원의 사법적 처리가 선행된다면 그 판결이 설득력을 잃을 것은 자명하다. 최소한의 예술작품에 있어서의 사법적 판결이 능사가 아니다.

시론

윤 봉 용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 회장>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지식과 인적자본의 생산에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과 인적자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의 생산과 형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고급 지식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육기관을 효율화시키는 문제

것이다. 그동안 교육개혁에서 사학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립대학 재단의 의사결정구조가 거론된 이유도 바로 재단의 대학경영방식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광복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립대학의 설립자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교육이념을 표방하였지만 그들의 내밀한 목표는 대부분 이재(理財)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들의 의식에서 교육을 목표로 하는 대학경영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경영은 동일시되었고, 그 결과 대학은 이권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더구나 사학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군사정부 역시 체제유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대학의 권위주의를 부추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내의 반정부활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대학의 권위주의적 경영을 묵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정권의 지원까지 받게 된 대학경영의 권위주의는 난공불락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사학을 신성불가침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영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사학경영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사학경영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난무하고 실제로



▲권위적 대학경영 벗어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

기업경영도입대학, 창조적 학문 연구 등한시

독단적 대학행정 벗어나 사회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을 주체로하면서 대학교육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 대학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시각보다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교육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인식의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그동안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영을 책임진 것은 사립학교 재단(정확히는 사학법인 이사회)이었다. 따라서 현실로 나타난 사립대학의 비효율성은 결국 사립대학 재단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할

재단에 대한 외부감사제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경영을 둘러싼 이권추구행위는 한국사회 전반의 부패구조의 일부로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주의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학사에 대한 대학교수의 관심이 자칫 대학경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설립자들은 대학교수의 학사행정에 대한 관심조차도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로 인해 대학경영에 관한 결정권이 한 사람 내지 극소수 일시에 집중된 권위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과거의 군사정부 역시 대학내의 권위주의를 확립하는데 서지 않은 기여를 했다.

상당한 수의 사립대학은 불신에 걸맞는(?) 부패와 부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사학이 특정인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되면 대학에 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어느 누가 특정인의 재산이 증식되기를 바라며 피땀흘려 모은 재산의 부할 수 있겠는가? 그 결과 사학의 교육환경이 낙후의 간을 걷게 되었다는 점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이다.

한편, 권위주의적인 대학경영은 설사 그것이 부패하지 않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대학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곳이다. 그리고 창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조건은 자유정신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에만 과거의 틀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이 창조될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대학경영은 바로 이 자유정신을 억압함으로써 창조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위축시킨다. 일명 교수재임용제는 그동안의 교수들의 자유정신을 억압하는 최일선의 제도였다.

때때로 박정희식 권위주의적인 경영이 오히려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명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대학에 있어서는 더욱더 사실과 거리가 멀다. 교육은 학생과 교수의 자발적인 교육동기가 유발될 때 비로소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참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은 전공과 학생의 특성, 교수의 성격 등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이 조화롭

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대학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같은 개혁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이러한 연유로 현 사립대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립학교법인은 이러한 기존의 모습을 따라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대학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새로이 마련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에선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청원'을 벌여 서명인을 모집한 후 지난 26일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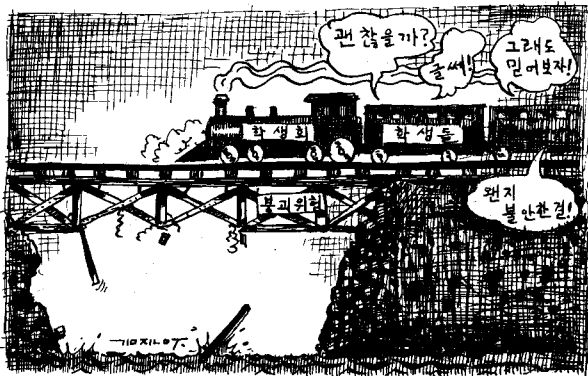
그 청원 안으로 △공인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제 도입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및 총장의 재산등록 및 공개 △교수재임용제 폐지와 연구 · 교수업적에 근거한 정

년보장임금제도 도입 △총장 이사회 임명시 교수회의 재정에 의함 등이 있는데 특히 '교수회의 제정에 의하는 총장임명'은 대학구성원의 합의를 총장임명의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총장선출을 둘러싼 불필요한 학내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제까지 사립대학은 부지불식간에 특정인이 소유한 신성불가침의 재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학을 만드는 데 벽돌 한장 쌓지 않은 사람들..."라는 문구로 대 표되는 이같은 견해는 불식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은 그것이 국공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사회의 공익(空器)이다. 즉 대학은 우리 사회 모두의 재산이며 대학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최첨단의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다. 대학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명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사립대학의 개혁이 올바른 토대에 설 수 있는 것이다.

(PC통신원 기사남쳐 한 주 쉽니다)

고 황 만 평



"또다시 1년을 점치는 순간..."

고객의 마음, 포스틸의 마음입니다

쇠너머로 미소가 있습니다.
순박한 미소가 있습니다.

철을 세상에 내 보냅니다.

철을 기다리는 고객은 설레는 마음으로...

포항제철의 철강제품을 전 세계로 공급해 온 포스틸.

포스틸의 정성이 고객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철강의 의미
국가와 산업으로 조립된 미발견된 고강도 철강을 위한 서비스
안전성과 내구성이 높고 조립이 용이한 철강을 생산하며,
우리의 애정 어린 철강을 통해 내지는 철강의 미래를 상상한다.
국내의 기본철강은 포스틸이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사회를
구현하여 남미의 고강도 철강을 공급하여 세계의 미래를
나아가고 있다.

포스틸
POSCO Steel Service Co., Ltd.